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5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이성권
이만희 · 서천호 · 한지아
강명구 · 김용태 · 조지연
박정하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

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
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

제35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u>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 ② <u>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u>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u>

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신 설>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명령일부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

	<u>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u>
	<u>1.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 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u>
	<u>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u>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u>운영할 수 있다.</u>	① ----- ----- ----- ----- ----- ----- <u>운영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 ----- ----- -----

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생략)

2. ~ 10. (생략)

④ ~ ⑥ (생략)

--. 다만,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해당 동물
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
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